



- 농축산물 수입개방 -

농축산업보호 대책부터 세워라



서 기 원
농협대학 교수

1. 머리말

요사이 농민들의 가슴은 답답하기 그지 없다. 무거운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지난해 과잉생산에서 결과한 고추파동이 채 가지지도 않았고 모든 축산물가격도 한결같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데도, 미국이 우리에게 농축산물시장을 개방하라는 압력을 더욱 강하게 넣고 있다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또 추가적인 개방품목을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들려 오고 있기 때문이다.

농가경제가 오늘날처럼 악화된 것도, 고추파동이 생겨나는 것도, 또 축산물가격이 하락추세를 갖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대부분의 원인이 농축산물의 수입개방품목과 수량이 계속 늘어나는데서 결과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농민들이니만큼, 농축산물수입 문제만 나오면 그들의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물론 정부도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이 송두리채 무너질만큼 농축산물의 수입을 개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어떤 품목들을 추가로 개방할 것인가를 곧 발표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는 정부가 이를 선뜻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수입개방과 농축산업보호라는 양면을 쉽사리 조화시키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농민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추가로 개방할 품목을 발표하는 것은 언젠가 하더라도 그에 앞서서 농축산업보호를 위한 대안(代案)제시나 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피해에 대하여 어떤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충분히 발표할 수 있을텐데도 이것마저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강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우리의 농축산업이 살아 남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수입때문에 발생할 농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농민들도 각자의 영농방향, 양축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그 점에서 필자는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가 될만한 몇가지를, 이 자리를 빌어 제시코자 한다.

2. 지나친 미국의 개방요구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수입자유화율을 높이고 농축산물시장을 개방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오기 시작한 것은 1985년도부터이다. 8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였으나 85년부터는 이른바, 3저현상 즉 유가하락, 달러가치하락, 국제금리하락등에 힘입어 처음으로 무역흑자국으로 되었다.

그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흑자폭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흑자가 주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데 있다. 즉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85년 43억불, 86년 74억불, 87년 95억불, 88년 86억불등으로 그 흑자폭이 커져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농축산물시장을 개방하라는 압력을 갈수록 높이고 있다.

88년도의 경우, 미국은 수입자유화율인상, 관세율

인하, 「원」화절상등을 요구하고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의한 수혜품목축소조치등을 단행하는 한편 농축산물에 대하여는 품목별로 쇠고기, 포도주, 알팔파사료등의 수입자유화와 담배가격인하등을 요구하였다. 그리고는 쇠고기수입을 제한한다고 GATT에 제소(提訴)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88년말에 와서는 농축산물에 관한한 개별품목접근을 피하고 전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시장개방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즉 HS10단위 기준으로 지금까지의 수입제한품목중 84개를 자유화하고 40개품목은 제한을 완화하며 비관세장벽도 완화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관세율인하도 HS 10단위기준으로 농산물 95개품목, 임산물 52개품목을 요청했으며 「원」화도 더 절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우리의 수입자유화율은 80년의 전상품 80%, 농축수산물 64.3%가 88년말에는 전상품 94.8%, 농축수산물 72.6%로 높아졌으며, 관세율도 80년의 33.2%에서 88년에는 25.2%로 낮아졌다. 또 「원」화절상도 1달러당 86년5월에 890원이던 것이 89년2월에는 668원으로 낮아져 이 기간중 무려 33%나 절상됐다.

이상과 같은 한국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들어 와서는 그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GSP품목을 완전히 없애는 한편 농축수산물의 경우 그 품목수에도 가공품과 부산물등을 포함시킨 세(細)품목으로 분류하여 600개품목중 504개품목을 자유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참으로 엄청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만약, 만약에 말이다. 이상의 농축수산물 수입을 완전히 개방한다면 우리나라의 농업, 축산업, 수산업은 모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840만 농어민은 농어촌을 떠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것은 극단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이미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정부가 농축산업이 그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

도, 국민일보도, 농어민도 인내심을 가지고 이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누가 뭐라해도 담당하고 불안한 계층은 농어민이다. 새우젓이 풍년인데도 이것이 싸다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대기업이 있고 고추가 과잉생산되어 농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고추장을 수입하는 무역업자가 있어 더욱 그러하다.

3. 한국은 미국농축산물수입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위에서도 본 바와같이 한국은 그동안 수입자유화를 꾸준히 높여 왔다. 그결과 수입량이 크게 늘었으며, 특히 농축산물의 수입은 괄목할만큼 늘어나 87년의 경우 그 수입액은 22억불이나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곡물로서, 이는 대부분 축산사료의 수요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사료용 곡물의 주종은 옥수수, 콩, 밀등이지만 이들의 수입량은 이미 1천만톤을 넘어서고 있어, 이 세 품목의 수입의존율은 각각 97.3%, 82%, 98%를 보이고 있어 이미 이들의 국내생산기반은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처럼 막대한 농축수산물의 수입액중에서 우리가 미국으로 부터 수입하고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은 무려 49%나 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농축산물수출대상국중 제4위를 기록할만큼 비중큰 수입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입국으로서의 비중을 수입한 절대액(絕對額)만 가지고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안된다. 수입국의 인구규모와 소득수준 등을 함께 감안해서 비교해 보아야 한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농축산물수출시장에서 대만 다음을 차지하는 제2위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최근 우리나라는 쇠고기수입의 경우 과거에는 주로 호주에서 수입하였으나 지난해에는



값이 비싼 것을 알면서도 전량 많은 양을 미국에서 수입하였으며 금년도에 수입할 쇠고기도 많은 양을 미국에서 수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것처럼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축산물수입에서조차 미국에 대하여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 왔다.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거래에서 600억불이 넘는 흑자를 보이고 있음에도 농축산물수입에 관한한 우리가 더 비중큰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우리나라 농민은 일본이나 대만의 농민과 비교할때 그 처지가 다르다. 우선 그들은 우리나라 농민들만큼 소득의 크기에 비해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 또 일본과 대만의 농가소득은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즉 일본은 농축산업에서 얻는 소득이 18.3%(86년), 대만은 36.4%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라 농가는 농축산업에서 얻는 소득이 61.5%나 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농축산물개방품목이 늘고 수입량이 확대되면 될수록 그만큼 농가경제가 입는 타격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상과 같은 점을 미국은 알아야 하며 우리 정부도 이런 면을 부각시켜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4. 수출대가(代價)를 왜 농축산업이 치러야 하는가.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미국으로부터 시장개방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은, 우리의 농축수산물에 미국시장으로 너무 많이 수출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지난해 우리가 미국시장에 판농수산물은 고작 7천만불을 웃도는 금액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도 농축산물은 소액이고 대부분 수산물이 차지하고 있다. 그대신 수입은 11억불이나 되었다. 그러므로 농축수산물만의 무역을 따지면 우리는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무역흑자를 낸 것은 자동차, 전자제품, 의류, 신발류등 공산품을 미국에 많이 팔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해야 살 수 있는 나라이다. 인구는 많은데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잘 사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안다.

그러나 공산품을 많이 팔아서 무역불 균형이 생겼는데, 그 대가(代價)로서의 희생은 왜 농축산업부문에서 치러야 하는가. 공산품수출에서 생긴 흑자의 책임을 농축산업부문에서 받아야 한다면 그동안 수출을 통해 많은 이익을 올린 수출기업들은 우리 농민, 농업, 농촌이 짊어지고 있는 고통을 얼마나 이해했으며 또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노력은 커녕, 그들의 이익중 일부를 농축산업부문에 돌려주는 커녕, 일부 기업들은 도리어

미국농산물의 수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보아온 것이 실정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이 우리에게 가해 오는 농축산물시장개방압력을 보면서 수출기업들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그들은 통상법 301조를 발동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총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시장에의 진출은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는데 그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민주화과정에 있다. 민주화는 다수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름아래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거나, 소수의 이익이 소홀히 되는 것을 막는데 있다할 것이다. 또 민주화는 경제적 민주화가 달성돼야 꽃을 피우게 된다. 현재와 같이 총인구의 18.5%나 되는 농민들이 모두 소외계층으로 남아 있는 한 우리의 민주화도 선진국으로의 진입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수출이 일시 둔화되거나 신용장래도액이 줄어 들거나 또는 수출기업의 일부가 채산성의 악화로 도산되거나 하면 대서특필하면서도, 농민이 빚에 건디지 못하여 빚잔치끝에 농촌을 떠나거나 폭락된 농산물 가격으로 농민이 실의(失意)에 빠지거나 또는 농촌 총각이 장가를 가지 못해 농촌을 등지는 사태가 생겨도 그에 대하여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언론매체에도 문제는 있다.

지금은 소외계층들의 고통을 다함께 분담해야 할 때이다. 농축산물수입의 확대때문에 농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우선은 수출기업이, 그 다음은 도시민들이 함께 분담해야 마땅하다.

5. 농축산업보호대책부터 세워라.

농축산물시장개방압력에 대한 대응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각계각층이 한결같이 지

해를 모아야 한다. 오늘날 농어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우리 모두의 고통이라는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 이러한 농어민의 고통이 전국민의 고통으로 공유(共有)될 때만이 외국으로 부터의 어떠한 압력도 능히 극복해 낼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정부는 농축산업보호를 위한 대책부터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떤 품목들을 추가적으로 개방할 것인가에만 골몰하는 자세와 접근방법은 버려야 한다. 정부가 검토해야 할 보호대책과 수입에 따른 보완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농축산물품목을 엄선하고 이들 품목은 끝까지 국내생산으로 충당해 나간다는 정책의지를 보여야 한다. 개방압력이 있을때마다 수시로 개방을 확대해 가는 방식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생산해야 할 품목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그 합계가 90%가 되는 선에서 결정하면 될 것이다.

이 점은 우리가 일본에서 배워야 한다. 그들은 수입자유화정책을 펴는 초기단계부터 CCCN 4단위로 22개품목을 선정하고 이들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압력이 있을때마다 수입할당량은 가감(加減)했지만 수입제한은 끝까지 풀지 않고 있다.

이 경우 명심할 것은, 포도수입은 막고 포도주는 개방한다던가, 쇠고기는 막고 쇠고기 가공품은 개방한다거나 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품목이 결정되면 그의 가공품이나 부산물도 함께 수입이 제한돼야 마땅하다.

둘째, 생산성이나 경제력이 약한 품목은 작목전환을 유도하고 그에 의한 폐경(廢耕), 작목대체의 경우에는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해야 하며, 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농축산물은 생산기반을 확충해 주고 농업기술개발을 통해 지원하며 개방후에도 수입대항능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수출기업이 수출한 금액의 1%범위내에서 수출부과금을 징수하여 이를 농민에게 소득보상금의 형태로 돌려 줘야 한다. 금년도의 수출예상액 600억 불이 달성된다면 이의 총액은 6억불, 원화로 4천억원이 될 것이다. 해마다 이 정도의 자원이 확보된다면 이는 농촌경제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물론 수출부과금에 대하여는 기업측의 반발도 많을 것이다. 노사분규로 인한 임금인상, 「원」화절상, 고금리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수출조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 수출부과금까지 부과하면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된다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1%가 주는 부담은 미미하며, 원가상승요인은 경영합리화로 흡수하는 자세만 갖추면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출부과금의 부담은 도리어 수익자부담원칙에 일치하며 도농간의 소득재분배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출기업에 대한 농민의 반감(反感)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무형(無形)의 이익이 더 크다.

넷째, 수입부과금도 확대하며 이를 보조금의 재원으로 써야 한다. 보조금은 생산비보조, 가격지지, 소득보조, 수출지원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정부가 금년도부터 우리나라도 GATT의 18조국에서 11조국으로 이행했고 또 우루과이라운드에서도 지난해 12월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중간평가회의에서 보조금지급중단 문제가 주요의제로 되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 회의에서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할만큼 합의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며 또 오늘날 선진국의 농업조차 막대한 보조금수혜속에서 유지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제대로 시작도 못해본 우리나라 지레 겁을 먹고 피할 이유는 없다. 도리어 우리는 지금부터 농축산업보호를 위한 보조금지급을 확대하고 농촌개발과 농업기반조성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할 때이다.

국제무역협상이라는 것도 이미 농업기반조성이 끝나고 막대한 보조금지급을 통해 농업을 보호해온 선진국과 그렇지 못한 개도국이 같은 조건과 자격으로 협상을 벌인다는 것은 년센스라 할 있다.

다섯째, 비관세장벽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슬기도 보여야 한다. 비합리적인 비관세장벽은 배척되어야 하지만 수입식품의 경우 위생기준을 강화하는 것 등은 얼마든지 합리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여섯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확대조성과 함께 농축산물수입에서 얻어지는 관세수입과 조세수입중 세제(歲計)잉여금은 이를 전액 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일곱째,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의 추천권을 가가급적 농민단체에 맡기거나 또는 그 단체가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액이 그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전액 돌아가도록 해주어야 한다.

여덟째, 농축산물무역문제는 이를 수입문제해결에만 집착해서는 안된다.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촉진에도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품목에 따라서는 정부가 약간의 보조 내지 지원만 하면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 적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끝으로 정부는 농민의 농의소득증대를 위한 정책도 더욱 확대·강화하고 농민들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